

바람직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방안

(0606) 합포고등학교 이 필 우

들어가며

학생생활규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바르게 생활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결맞게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오늘날의 가치관과 교육 환경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이를 적용해야 하는 학교현장에서는 생활지도담당교사들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불만이 표출되었다. 밖으로는 교육사회단체¹⁾들의 활발한 연구와 개정 요구가 있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권고안²⁾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3년 전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통보 요약문에 대한 견해³⁾를 보면 같은 정부 내에서도 인권 인식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앞서 범주의 외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가 -일부 조항을 유보하였지만-1991년 비준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⁴⁾은 국제적으로 1990년부터 발효되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4가지 주요한 인권영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무를 다하게 하고 있다.

1)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 광주, 경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2) 2002년 6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생활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뒤 2002년 9월 9일 위원회법 제25조에 의거, 학교생활규정은 예시안이라는 하나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이 예시안이 학생 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안」 또는 그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과 차별 허용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했다.(15개 항 내용 생략)

3)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11월 19일 학교 내 체벌금지 등 우리 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인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7항의 개정 권고에 대하여 “교직원단체, 관련 시민단체, 시·도 교육청 및 학교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좀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개정 권고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자임을 들어 학교운영에 참가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당사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5년마다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4년과 2000년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여 1996년과 2003년 한국정부에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PA)에 제시되어 있는 학생생활규정

바야흐로 우리 사회에도 인권 의식이 저변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학생생활규정에 남아있던 비인권·비민주적 내용에 대해, 정치권⁵⁾과 학생, 교사, 학부모단체들은 이제 문제제기의 차원을 넘어 대안⁶⁾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P)’⁷⁾ 수립(2006. 1)은 이제 우리 나라도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비롯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⁸⁾할 것임을 공식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유엔 총회는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폐지하고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를 신설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60여 년간 전 세계 인권논의의 장으로 자리잡아왔던 유엔인권위원회가 올해부터 유엔인권이사회⁹⁾로 그 지위가 격상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지난 5월 9일(현지시각) 열린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초대이사국으로 뽑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PA)에 제시되어 있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목적,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를 활성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보장하며 핵심추진과제로서 학생이 학교

5) 국회교육위 국회의원(최순영, 구본회)

6) -. 2001. 10 .22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표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는 캠페인 결과 보고서
-. 입시교육, 권위주의 문화 속의 학생인권 -2004년 마산, 창원지역 고등학생 학생인권보고서 이필우
-. 2005. 경남지역 초중고 100개 학교 학생생활규정 분석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경남협의회

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의 인권정책의 청사진(master plan)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임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상황과 개선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권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8) -.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는 만장일치로 결의한 ‘비엔나선언과(정책)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서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음
-. 2001. 5. 21.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2006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은 세계적 추세로 1993년 호주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2005년 5월 현재 20여 국가가 이를 완료했으며 해마다 수립국이 증가하고 있음

9) 유엔인권이사회는 △그 지위를 유엔총회의 직속 보조기구로 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고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운영하게 되며 △이사국 선출시 후보국의 인권상황을 적극 고려하고 이후 퇴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한국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 47개국을 뽑는 선거에서 아시아에 배정된 13개 이사국 가운데 7위로 선출됐다. 초대 이사국의 임기는 1·2·3년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추첨을 통해 2년 임기 이사국이 됐다. 인권이사회는 1년에 적어도 세 차례, 모두 10주 이상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를 여는 등 사실상 준 상설기관 구실을 한다.

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교생활규정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2002. 9)하고 있다.< 참고자료 1 >

둘째,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개인의 양심·신앙에 대한 신념을 보호함에 있어서 핵심추진과제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학교의 종교 교과목이나 종교행사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부여함’을 권하고 있다. < 참고자료 2 >

셋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중 교육권에서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질 높은 교육으로 교육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핵심추진과제로 ‘초·중등교육법 등 학생의 징계·체벌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참고자료 3 >

넷째, 인권교육 강화 중 학교부문 인권교육에서는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인권 감수성을 고양을 위해 핵심과제로 ‘학교 생활규정 정비 등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자료 4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에 대한 변화 인식과 우리 나라의 정책 기조는 ‘인권’이라는 세계 보편적 가치의 흐름의 한 지류임에 틀림없다. 이에 발맞추어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타 시도교육청도 단위 학교 현장에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학생생활규정 개정¹⁰⁾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인권,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작업은 경남교육청의 시책사업으로 올해 경남의 각 초·중등학교는 1차 시한(4.18)50%, 2차 시한(11월까지) 80%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학교규칙(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의 범위

학칙이란(학교규칙): ‘학교의 기구와 교육 과정 및 그 운영과 관리 따위를 정한 규칙’으로 초·중등교육법¹¹⁾에 명시했으며, 제·개정 절차¹²⁾ 또한 대통령령으로 명시

10)

- 2005.12. 교육감 지시사항 (학교생활규정의 학생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도록 할 것)

- 경상남도교육청 (2005.8)학생생활지도 관계자 연찬회 자료집(p37-47) 학생생활규정 개정대상 (학생회규정)출마조건, 선출학생 승인절차, 회칙 개(제)정 권한, 예·결산권한, 무투표 당선 시, 학생회 회칙 효력 정지, 외부활동 규정

(용의 복장)두발, 신발, 가방, 기타(배지, 마스코트, 속옷 색깔)

(징계규정)진술기회 부여, 제심요구 권한, 징계학생사면규정, 징계학생에 대한 포상규정, 체벌,

(절차)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

11) 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 해당하는 ‘학생징계’,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과 ‘학칙개정 절차’ 중 앞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학생생활규정이다. 그리고 최근 각 시·도교육청별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는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까지 학교에서 제·개정하던 절차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는 민주적 절차와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또는 결정토록 하고 있다. < 참고자료 5 >

지난 해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경남협의회¹³⁾가 수집 조사(한 2005. 10-11월)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생활규정은 학교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경남교육청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초·중고 중 학생생활규정을 공개한 학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초·중학교가 의무교육과정임에도 학생생활규정은 학교마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부분인 많았으며, 특수성이 인정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자료를 얻기 위한 질문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학생생활규정 자체를 모르거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있었다. <참고자료 6>

그러나 형식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학생생활규정에 나타난 다수의 공통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선도(징계)규정’, ‘학생체벌규정’, ‘학생생활수칙’, ‘학생회 선거규정’, ‘대의원의 출마 및 자격기준’, ‘동아리 회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 합포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배경

- 1)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성과 신뢰감 형성되어 있음
- 2)학생자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학교장의 철학
- 3)과정이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자발성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얻는 결과가 교육적

12) 학교 규칙 제(개)정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확인 ②전 학년도 학교 규칙 확인 ③당해 연도 관리해야할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여 기획위원회를 통해 개정해야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협의 결정
- ④개정할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규칙 수정·보완 ⑤학교장의 결재 ⑥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음 ⑦전 직원에게 안내 ⑧관할 지역교육청에 보고

- 13) 폭력 추방을 위해 민(民)·관(官)이 함께 참여하는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2005.5)’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와 김진표 교육부장관, 김창국 전 인권위원장 등 시민운동단체 회원, 사회 원로 등이 참여했으며, 개인의 인권과 가치관이 존중되는 사회, 대화와 타협, 민주적 참여의 성숙한 사회, 진정한 도덕적 권위가 형성되는 사회를 모토로 하고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등 4개 분야를 주요 활동 영역으로 선정했다. 산하에 전국16개 시·도지부를 두고 경남은 관(경남교육청·경상남도청·경남검찰청·경남경찰청)과 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며, 오래 지속된다는 것에 학생과 교사가 공감하고 있음

4)학생회와 학생부가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생활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공감하고 있음

5)학생자치의 실질적인 활동(매점관리위원회, 학생축제준비위원회, 학교급식협의회)이 2-3년 전부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6)지난 해 경남·부산지역 MBC-TV '고등어' 청소년토론 프로그램에서 '학생생활수칙'을 토론 의제로 설정하고 출연한 사례와 스스로 설정한 2005합포축제 '우리 모두 소중하다.' 참여를 통해 인권과 학생생활규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탕에 있었음

4. 합포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

학생회는 12월에 집행부가 구성되고 임기가 시작되는 3월, 학생간부수련회에서 해마다 학생생활규정 중 학생생활수칙을 개정하기 위해 학생회 대표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해서 안건으로 제출하고 심의하여 개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학생생활규정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작업은 많은 준비와 시간 그리고 전문성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힘듦은 물론,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를 얻어내야 하는 도심 인문계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개정 절차의 방향과 목적은 지금까지 쌓아 온 학생과 교사의 신뢰와 친밀감을 교육적으로 최대한 살려 보자는 데 있었다. 2004년부터 시작된 합포고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교운영' 교육 방침에 따라 2006학년도 합포고 학생부의 기본 방향은 학생부 교사들이 협의하여 '학생자치활동지원부'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된 학생회 집행부와 함께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이 제의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우리 손으로 만들 때 가장 잘 지킬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학생회의 구성과 학생자치활동 설명)

2)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영역별 학생회 집행부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학생선도 규정, 학생체벌 및 생활수칙, 학생회 활동 관련 규정, 동아리회칙 등)으로 팀장 구성 및 활동

3)학생회 간부 리더십 연수(간부의 역할과 의무, 회의 진행 방법, 학생회의 구성과 활동범위, 리더의 조건 등으로 3.14 실시)

- 4)2006 학생간부수련회 의제 안건 공고 및 확정(1. 2006 학생자치활동 방향 중
2. 학생생활규정 개정 3. 2005축제 평가를 통한 2006 합포축제 주제 및 프로그램
계획 수립 4. 2006교내체육대회 프로그램 및 진행방법 수립)
- 5)2006 학생간부수련회 대의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학생생활규정을 학생회 측 단
일안으로 확정(개정 완료까지 부족한 부분은 학생회 대표에게 일임함)
- 6)수정 완료된 학생회 측 단일안을 전 교사에게 메신저로 보내어 검토 및 이의 사
항을 물음(특별한 이의 제기 없음)
- 7)학생회 대표와 학생부 선생님들과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일부
수정, 첨가, 삭제를 통해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함.
- 8)합의된 학생생활규정을 전 선생님들에게 알리고 이의 사항을 물음(이의 제기 없음)
- 9)학생선도위원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을 마치고 학
생회 대표에게 전달함(학생회 측 모두 만족함)
- 10)2006합포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안) 확정
- 11)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2006 합포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완료

5. 2006 합포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과정과 내용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설명

2006학년도 합포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구성은 총 8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
며, 분량이 많은 관계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ppt로 대신합니다. 자료를 원하시
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홈페이지 참교육 실천 자료실’에 실려 있습니다.

6. 학생자치활동과 밀접한 학생생활규정

합포고는 최근 학생생활규정 개정으로 인해 경남을 넘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그러나 정작 합포고 학생들은 뭐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한다. 학생회장의 말은 “그저 우리 학교가 이웃 학교보다 개인적으로

는 좀더 자유롭고 학생의 의견을 좀더 존중해 주고, 선생님과 학생이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것과 전체적으로는 학생회를 통한 의사 결정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지원과 문화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타 학생회장들과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위 물음과 사실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경쟁 중심의 입시교육과 거대, 과밀학급의 틀 속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학생자치활동의 범위와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있다는 것이며, 활발하다는 학생자치활동 또한 학생회가 주도하는 전체 행사 때 외는 학생회 대의원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졸업한 선배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진 지금에서 3학년 학생들과는 달리 1, 2학년 학생들은 복장을 비롯한 학교생활의 불편함과 의사소통의 절실함, 학생행사를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 고등학생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2006 합포고 학생회는 지난 3월 학생간부수련회에서 학생회 자치활동을 학급자치활동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합포, 합포인’¹⁴⁾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집을 파일에 담아 각 학급에 비치하고 학생들이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맺음말

과거에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그 과정과 내용으로 볼 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시대와 의식, 환경이 바뀐 지금 학교는 외부로부터 변화에 둔감하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것은 교육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지향해야 하는 특수성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앞서 제기된 이러한 규정들은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의 장이며, 청소년은 미래가 아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격체를 키우는 장이라고 한다면, 외부로부터 요구가 있기 전에 학교 스스로 이러한 규정들을 바꾸어 가는 문화가 필요했다고 본다.

지금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잘못하면 맞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학교에서 체벌은 교육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 속에서 자라왔으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과 규칙 또한 이유 없이 따라야 한다는 학교문화 속에 살았다.

14) 2006 합포고 학생회 학급자치활동 중점 사업으로 지난 간부수련회에서 1호 의안으로 결의되었음. 월 1회 학생회 산하 정보부와 방송반이 함께 제작한 10분 정도의 영상물을 통해 학생과 담임이 함께 시청하고 학급 회의를 통한 생활관련 문제해결, 건의사항,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1호 의안으로 상정 결의되었던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사는 더 힘들다. 이것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¹⁵⁾에서 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에 걸맞은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대정신과 함께하는 교사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거대학교, 과밀학급, 입시교육 중심의 타아소 같은 학교 운영의 틀을 개선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은 더 이상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다.
 청소년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의 주인공이자 희망이다.
 ·청소년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은 참여와 배려, 존중의 대상이다. 이 필 우

<참고자료>

참고자료 1. 2007-2011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70-71쪽)

5-5. 아동의 참여권 보장

목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를 활성화함
----	-----------------------

□ 현황 및 필요성

- 아동과 관련된 각종 정부 정책 수립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 등이 미비하여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학생의 교육 및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청소년복지지원법(제3조, 제4조)은 청소년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함
- 교육기본법(제5조)은 학생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이 학교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교생활규정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15) 이필우 입시위주, 권위주의 문화 속의 학생인권-2004 마산·창원지역 학생인권보고서 (32-33쪽)

언어로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함(2002.9)

-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은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경우 아동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견해를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하게 비중을 둘 것을 명시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초·중등학교에서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교외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교육부 지침과 학교 교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2003년)

□ 국가 정책방향

- 가정·학교·사회에서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아동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 및 아동의 참여 보장
-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학생 대표자 및 당사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참여 보장
- 부모의 합의이혼 시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문제를 반드시 합의하도록 관련법 정비

참고자료 2. 2007-2011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116-118쪽)

1-7. 양심·종교의 자유

목표	개인의 양심·신앙에 대한 신념을 보호함
----	-----------------------

□ 현황 및 필요성

- 국가보안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아 2005년 7월 11일 현재 1,053명의 병역거부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음
-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교 학교의 종교교육 시 특정 종파의 교육을 사실상 강요하고, 일반교육 및 행사 진행과정에서 특정 종교의식을 강제하여 학생의 종교 선택의 자유와 교육권이 침해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유엔자유권규약(제18조)은 모든 사람의 사상과 양심,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종교나 신념의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 규정함

- 유엔인권위원회는 1987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결의함
 - 특히 1998년 제77호 결의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양심적 거부의 이유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도입하되, 그 대체복무는 공익적이고, 징벌적 성격이 아닌 비 전투적 또는 민간적 임무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 정책방향

-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종교로 인한 차별 또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 문제 해결
-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인정과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학교의 종교 교과목이나 종교행사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부여
- 군인(兵)의 종교 활동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3대 중단으로 한정된 군종장교 임명대상을 확대하여 군대에서 종교자유 확대

참고자료 3. 2007-2011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141-143쪽)

2-6. 교육권

목표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질 높은 교육으로 교육권을 보장함
----	----------------------------------

□ 현황 및 필요성

- 취약계층 학생(저소득층·장애인·새터민·이주노동자·농어촌 지역 등)의 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이 미흡함
- 과도한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으로 학교 교육이 왜곡되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기회가 제약받고 있음
- 학교교육 내용에 여성·성적소수자·장애인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함
- 학생의 징계 및 처벌에 대한 관련법 규정에서 교육적 체벌을 인정하고 있으며 징계 및 체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위임되어 있음
-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된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심화되어 학생의 인권이 침해됨
- 학교 내 환경 및 식품 위생에 대한 관리점검 부족, 학교주변에 무분별한 유해업소 설치 등으

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학생의 권리가 침해됨

- 학생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법령 제정이 미흡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학생의 정보인권이 침해됨
- 학령기(15세~19세)에 사회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약 20만 명으로 추정될 정도인데도 대안학교, 전일제, 원격교육, 기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제도가 충분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의 취지와 달리 노동착취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음
- 독학사 학력인정의 실질적 제한,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연계미약, 평생학습 지원기관의 체계적 관리 부족 등으로 사회교육 및 평생학습이 활성화되지 못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은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제31조 제1항), 국민을 교육할 국가의 의무 및 무상의무교육제(제31조 제2항 이하) 등을 규정함
- 유엔사회권규약(제13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제28조 제1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 인정 및 기회균등을 규정함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고등교육 확대, 인권교육의 실시 권고(1995년), 공교육강화 계획수립을 권고함(2001년)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풍토의 교육제도를 지적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 입각한 조치 시행을 권고함(1996년, 2003년)

□ 국가 정책방향

- 정규교육·비정규교육·평생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 관련된 제반 환경에서 교육권을 보장함

□ 핵심 추진과제

- 취약계층학생(저소득층, 장애인, 새터민, 이주노동자, 농어촌지역 등)의 교육기회 확대
- 교육내용을 정비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성적소수자·장애인 등의 편견과 차별 해소
- 초·중등교육법 등 학생의 징계·체벌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부 및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조관계 형성
- 현행 법령상 학교유해환경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통한 학습권 침해 예방
- 학생정보의 수집·열람·정정 절차 등에 대한 학생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 교육행정

-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시 인권침해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으로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보장
- 정규학교 이외의 아동·청소년 및 중도탈락 성인에게 대안학교, 원격교육, 기간제 과정 등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
 - 독학사 차별 폐지 및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통합방안 강구 등의 제도개선으로 평생교육 기회 확대

참고자료 4. 2007-2011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151-152쪽)

3-2. 학교부문 인권교육

목표	학교부문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인권감수성을 고양함
----	-----------------------------------

□ 현황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체계적인 인권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인간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 문화를 극복하고 친인권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아동 시기부터 인권교육을 강조해야 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 사례

- 17개 주요 국내 인권단체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인권교육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할 것, 인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비정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참여정부의 인권정책과제를 제안했음(2004년)
-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2005~2007)은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실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인권교육이 인권 관련 종사자들의 필수교과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을 위한 교과과정을 재평가할 것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함(2001년)

□ 국가 정책방향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해야 함

□ 핵심 추진 과제

- 학교 인권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과정과 모든 교과에 인권내

용의 체계적 통합·편성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보급으로 인권교육 강화
-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양성과정 및 교원연수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 학교 생활규정 정비 등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인권교육 연구기반 조성

참고자료 5. 경남교육청 2006. 학생 생활지도 기본계획(06. 3)

2. 기본생활 습관형성 지도 강화

■ 목 적

-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교사·학생·학부모가 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통하여 기본생활 습관 형성과 학교폭력과 비행을 예방하는데 있음

■ 방 침

-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방법 강구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학교생활규정 준수 의식 제고
-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신상필벌 적용
-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 가능성이 있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 추진 내용

- 1) 기본생활 습관 자율실천 덕목 설정 지도
(생략)
- 2) 학생 의견수렴 및 민주적 의사 결정사항 준수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 가능성이 있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학교생활규정 준수 의식 제고
- 3) 학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 운영
 - “다정한 말 사용”운동 전개
 - 설문조사 후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 조사
 - 학생이 교사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친구간에 “좋은 말”, “나쁜 말” 게시 “좋은 말”만 사용 결의·실천
 - 즐거움을 주는 칭찬 프로그램 운영
 - 칭찬 마일리지 활용 : “좋은 말” 사용 모범 학생 추천
 - 장점 찾아 칭찬하기 : 매일 학급별 릴레이식 장점 찾아 칭찬하기
 -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는 생활지도 방법 지양

5.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 운영

■ 목 적

학교 교육활동에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공동사고에 의한 의사 결정의 토론문화 형성을 통한 민주적 생활태도를 함양하는데 있음

■ 방 침

- 학생회가 교내의 자치활동을 대표하고 추진하는 역할 수행 지도
- 학교내의 학생활동의 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
-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

■ 추진내용

1) 학교별 학생회 조직

- 학급·학생회 각 부서 조직 구성
- 부서에 대한 역할 분담
- 모듬활동과 연계 운영

2) 자치활동 이해교육 강화

- 간부학생 역할 교육 실시
- 토론과 토의 체험 교육 실시(주제 부여)
- 회의방법 및 회의운영 절차에 대한 안내 및 탑재

3) 학급·학생회 참여 확대

- 학생의견 수렴 절차 준수
- 학생참여 방안 마련
- 자치활동 시간의 전용 금지
- 학급회·학급회의 정례화
- 학급회·학생회 회의 기록 유지

4) 민주적인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 학생회실 확보 권장
- 자치회 중심의 생활지도 확대
- 학생 자치활동 예산 확보

5)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정 제정·준수

- 토론과 합의에 의한 학생 의견의 최대한 반영
- 학교전통 수립에 적합한 규칙 제정

6) 학생자치활동의 다양화

- 모의국회, 모의재판 제도 도입
- 자율적인 규율과 규제 마련

7) 학교 축제 문화의 활성화

- 교과학습 활동, 특별활동,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특기·적성교육 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
- 동아리 활동 장려

- 지도교사의 배정 및 공간 배려
- 학생 중심의 축제 문화 육성
- 교육활동 우수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격려
- 교육청 단위의 우수학교 발굴 및 홍보 강화

17. 학교 축제문화의 활성화

■ 목적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갖고 닦은 소질과 기량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개성과 창의력을 신장함

■ 기본방침

- 학생중심의 축제문화 육성
-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축제 행사 개최
- 건전하고 다양한 청소년의 놀이문화 개발·육성

■ 중점 추진 내용

- 1) 단위학교 축제계획 수립
 - 시기 : 2006.3월
 -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홍보
- 2) 친구와 함께하는 동아리 발표대회
 - 일시 : 2006.11.3
 - 대상 : 참가신청동아리(중,고)
- 3) 특기·적성교육활동 발표회 개최
 - 학교축제 행사로 실시
 -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 권장

■ 추진상의 유의점

- 전시, 공연, 동아리발표회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 권장
- 학교 및 지역교육청 단위 행사로 권장

22. 민주 시민·인권 교육 강화

■ 목 적

민주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한 세계관과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책임의식을 기르고 자유로운 사회에 모든 인간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알리는 것을 통해 보편적 인권문화를 형성한다.

■ 방 침

- 민주시민사회 실현을 위한 세계관과 그에 합당한 지식교육 강화
-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책임의식 제고
- 학생의 인권, 자율, 책임 중시 풍토 조성

■ 추진 내용

- 1) 민주시민, 인권교육 계획 수립, 운영
- 2) 준법 및 공공질서 의식 교육
- 3) 민주적,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신장
 - 학교 토론문화의 활성화
 - 학급회, 학생회 계발활동, 동아리 활동과정의 의사결정능력 신장
- 4) 학교급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용
- 5) 학생 존중을 위한 노력
 - 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제정
 - 각종 교육활동 중학생 인권 침해 부문 논의
- 6) 인권관련 국내 및 국제법 조사
 - 국제연합 어린이 인권조약 정신 준수
 - 인권조약정신 준수
- 7) 민주시민 · 인권관련 교육내용 게시
- 8) 관련 환경 게시 코너 설정

■ 추진상의 유의점

- 2006년 3월초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 인권침해 소지 부문 없게 제정 운영
- 국제연합 어린이 권리조약 정신 이행 충실

참고자료 6.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 폭력없는사회만들기 경남협의회

- < 학칙 조사 및 분석 결과 >

1. 조사방법

- (1) 대상학교 : 조사기간 및 자료수집 방법을 고려하여
경남지역 내 초·중·고 1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
- (2) 조사방법
 - 1) 홈페이지 2) 회신용 봉투를 사용한 자료 우편접수
- (3) 조사내용
학생생활규정(어린이회 조직, 운영, 학급 및 전교 어린이회 임원 선출 계획, 체벌규정, 생활규칙 포함)과 학교규칙, 학생자치활동, 징계의 과정과 방법
- (4) 조사기간 : 2005. 11. 1 ~ 2005. 11. 30 (30일간)

2. 자료확보 학교 및 비교기준

- (1) 자료확보 학교 : 경남지역 내 초등 8개교, 중등 15개교, 고등 19개교 등 총 42개교
* 홈페이지에 학칙 및 규정을 탑재한 학교가 적고 자료회신 요청에 회신응답이 적어
당초 계획대비 42% 정도의 자료수집율의 결과를 보임
- (2) 비교 기준
 -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2002년)
 - 2)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 3) 초중학교 생활규정 예시안 - 교육인적자원부 작성
 - 4) 경상남도 교육청 지침

3. 조사 결과

(1) 체벌 규정에 대하여

1) 비교기준 및 각종 지침

가)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체벌을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교육벌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교육벌에 관한 내용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되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 초·중등교육법

① 초·중등교육법 제 18조(학생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② 동법 시행령 제 31조 7항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 경상남도 교육청 학생체벌 지침

- 학생선도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벌을 하지 않는다.
- 체벌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 체벌의 기준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의하여 사회통념에 합당하게 정한다.
- 체벌은 일정한 장소(교장실, 학생지도실 등)에서 행해야 하되, 다른 학생 앞에서 행해서는 안 된다.
- 체벌은 아동에게 미칠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 체벌을 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방법 등을 제시하고, 학생에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학생이 수긍한 후에 행한다.
- 회초리 등 도구가 아닌 손, 발 등으로 체벌하지 않는다.
- 단위학교의 체벌규칙은 체벌할 도구(예: 회초리의 굽기, 길이 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모든 학생에게 알리고 엄격하게 적용한다.
- 체벌일지를 학급별로 비치하여 누가 벌점제 등으로 활용한다.
- 위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단위의 실정에 맞게 제정한다.

④ 생활규정 예시안

제41조【체벌기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2. 교사가 체벌할 때에는 사전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대체 벌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체벌의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고, 나아가 잘못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교육적 관점에서 감정적으로 체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체벌을 할 때에는 회초리의 기준(길이 50센티 이내, 지름 2센티 이내)을 설정하고 청소도구나 학습도구류 등을 사용하지 말 것,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의 금지하고 있다. 또한 체벌 부위(손바닥, 발바닥, 종아리 등)를 비교적 신체의 안전한 부위로 택하고 있으며, 직접체벌은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는 곳(교장실, 교무실 등)에서 함을 규정하고 있다. 체벌의 종류는 직접체벌(1-5대 정도)과 간접체벌(운동장 돌기, 손들고 서 있기, 무릎 꿇고 앉아있기, 지정구역 청소하기 등)이 있다.

2) 조사분석내용

가) 초등학교의 경우(괄호 안 숫자는 학교 수)

- 교사의 훈육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길 때 (7)
- 실내 생활규칙을 어길 경우 (3)
- 학습 준비물의 미비나 학습태도가 불량할 경우 (4)
- 학습태도의 불성실, 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때 (5)
- 쓰레기 함부로 버림 (3)
- 불량 언어를 사용할 경우 (3)
- 거짓말을 할 경우 (4)
-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 기타 체벌이 필요하다고 교육적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될 때 (5)
- 싸움을 할 경우 (2)
- 인터넷에 불량글을 올리거나 남을 비방하는 경우(1)
- 예의 없는 무례한 행동을 할 경우 (1)
- 일과 중 학교 밖 출입 (1)
- 군것질을 했을 때 (1)
- 학교 울타리 넘기 (2)
- 실내화를 신은 채 실외 출입 (1)
- 남을 해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 (1)
- 시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1)
- 학생으로 정당히 지켜야 할 의무 불이행 (1)
-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항변할 경우 (2)
- 고의적으로 학교 규칙(질서위반, 소란, 기물 훼손 등)을 위반했을 때(1)
- 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각 학교 체벌의 유형

나) 중학교의 경우

- 수업태도불량, 면학분위기 저해(직: 반성문3장 이내 3대/손들고 15분 서있기)
-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고의로 어겼을 경우 5장 5대/20분)
- 고의로 다른 학생을 괴롭힐 때(4장)
- 음주, 흡연, 도박(3장)
- 경미한 폭력, 부당한 금품각출, 집단따돌림, 집단폭행, 후배 길들이기식 폭행(5장)
¹⁾ 반성문을 셋-다섯 장은 1장씩 3-5일간 쓰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에게 잘못을 깨치고 반성하는데 목적보다는 고통과 반항, 거짓만을 키울 소지가 높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상담과 학급, 학교자치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습적, 계획적, 집단적, 위계에 의한 학교폭력은 생활선도규정에 따라야 한다.
- 체벌 실시 후 문서 또는 구두로 학부모에게 알려준다.
- 체벌 때 교실 밖으로 내보내어 학습을 받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 고등학교의 경우

- 12개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
- 법적으로 체벌의 권한이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에게 주어져 있다.
- 모든 학교에서 체벌의 권한이 교사에게 주어져 있다.
-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개념이 모호하다(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교사의 훈계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학 교 명	비 교	비 고
학교1	X	간접체벌의 방법을 명시하면서 간접체벌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직접체벌 실시. / 체벌의 장소는 학교(교실, 복도, 운동장)로 제한하고, 수업 중에는 교실 내에서 체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교2	X	간접체벌을 권장. / 2번의 반성기회를 주되 이를 또다시 어길 경우 체벌을 가할 수 있음.
학교3	X	체벌의 단계를 사랑의 대화-반성문-봉사활동-사랑의 매 순으로 정하고 각 단계를 3회씩 실시하다 최종 10회에서 체벌 / 체벌의 양도 학생이 정함 / 언어적 폭력도 하지 않음 / 반성문쓰기 이상의 체벌은 실시 후 학부모에게 통지
학교4	-	자료 없음
학교5	X	하급생에 대한 상급생의 체벌 금지/체벌 후 반성문의 제출로 개선정도 확인
학교6	X	금요 훈화교실 운영-교육 및 반성문 또는 소감록 작성 / 직접체벌의 전단계로 간접체벌의 방법을 규정
학교7	X	체벌은 학생이 잘못을 충분히 인식할 때 실시 / 반성문쓰기 및 학부모의 생활지도 일지 제출 외 직.간접체벌의 종류와 방법 규정 / 교육의 목적상 교실에서 할 수 있다.
학교8	X	무릎꿇고 앉아 있기, 서있기 같은 간접체벌 유형 규정/사랑의 매 외의 학습도구류 등 도구를 이용한 체벌 금지 / 언어폭력 금지 / 일부 학생의 잘못에 대한 단체기합 금지 / 누가벌점제 활용

(2) 어린이회 및 학생회 규정에 대하여

1) 비교기준 및 각종 지침

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회장과 부회장의 조건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의 내용은 보통선거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할 권고하고 있다.

나) 생활규정 예시안

제32조 【직무 및 선출】

②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율 90%이상이며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3.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2) 조사분석내용

가) 초등학교의 경우

- 제반 행동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언행이 바르고, 봉사. 희생정신이 강하고, 학습력이 우수하며 지도력이 있는 어린이를 아동들이 추천케 한다.
- 학교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 입후보 희망자

- 전교 회장은 6학년 지도위원 가운데 1명
- 학급임원은 자격 기준이 없음 회장, 부회장은 해당 학년에 3개월간 재학하여야 한다.
- 어린이회의 기능과 전반적인 운영(회칙의 재·개정, 예·결산, 감사, 임원의 인준과 불신임,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해 명시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중학교의 경우

- 성적이 전 과목 '미'이상, 징계 없음, 지도력이 뛰어나며 타의 모범, 40명 이상의 추천
- 학년말 성적 80점 이상, 근신 없음, 지도력 뛰어나며 타의 모범, 자기반 전체 2/3이상 추천
- 학업성적은 직전학기 과목 중 우등상을 수상하며 전과목성취도 '양, 가'가 없는 자, 출석률90% 이상인 자
- 학생회 구성에 있어서 각 부장 지명은 학생회 정, 부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명함.
- 규정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지도위원회를 두고 있음
- 동아리 활동

고등학교가 동아리회칙에 따라 구성되고 활동하는데 반해 중학교 생활규정에 서는 동아리회칙을 찾을 수 없었다.

다) 고등학교의 경우

- 학생회 임원 자격을 '전 학년 학업 성적이 양 가의 개수가 전체 교과목의 50% 이하인 자로 규정
- 학생회 임원의 자격을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함
-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당선된 학생회 임원의 임기를 '임기 중 이라도 교내 봉사 이상의 선 도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한다
- 학생회 입후보자 자격을 담임교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로 하여 자격기준을 심사 한다.
- 학생회에서 안건 작성하여 지도교사(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학생회 출마 자격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 직접 투표로 선출된 학생회 임원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동아리의 활동이 학생 신분에 위배될 경우 지도교사가 동아리를 해산하도록 한다.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회 회칙의 효력이 정지

(3) 징계의 심의 및 재심에 대하여

1) 비교기준 및 각종 지침

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당사자 학생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할 필요성이 불투명한 관계로 학교장의 재심의 부의에 대한 행사는 옳지 않음으로 당사자가 재심을 부의 하도록 권고한다.

나) 생활규정 예시안

제59조 【징계의 심의】 ①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생활선도협의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징계소위원회는 당사자(학생,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60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생활선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징계기간은 학교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① 학교내의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 : 6~10일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 소속 교육청지침 참고)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퇴학처분 :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중학생은 ‘퇴학처분’을 할 수 없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조사분석내용

가) 초등학교의 경우

- 해당사항 없음

나) 중학교의 경우

- 학교장만 재심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징계 때 진술기회는 대부분 담임, 관계교사에게만 있음
- 특별교육이수: 불건전한 이성교제, 풍기문란,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중징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 범위가 자의적이며, 학교나 교사 중심이다.
- 사회봉사 (행정기관: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 ☞ 초·중학생에게 위협하며 당연히 경찰이 해야 할 일이다.
- 사회봉사 (사회복지기관: 노인정, 장애시설)
 - ☞ 사회시설에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상담가가 주재하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이 운영 되는 곳에 위탁해야 한다.
- 교내봉사 : 10일 이내로 한다.
 - ☞ 제61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마다 제 각각이다.
- 퇴학처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2002학년도부터 입학한 의무교육대상 자는 퇴학 처분에서 삭제
- 징계해제 때 본인, 보호자의 서약서 제출
 - ☞ 징계기간 중 매일 반성문을 쓰게 하고 때로는 상담까지 하면서 본인과 보호자에게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징계대장에 기록 보관
 - ☞ 징계는 징계가 끝남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참고자료로 둔다 해도 해당 학생의 졸업과 함께 삭제되어야 한다.

다) 고등학교의 경우

- 징계 규정이 있는 학교는 퇴학규정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
- 징계 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 경우는 있어도 재심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재심의 기회를 주더라도 ‘재심의는 학교장이 필요할 경우’로 한정짓고 있다.
- 학부모나 학생에게 진술 기회를 주고 있지만 재심의에 대한 조항이 없거나 있어도 재심의 권한이 학교장에게 전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 징계전 학생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학부모와 관련 교사에게 진술 기회를 주고 있다. 징계를 할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징계 결정이 불합리할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4) 학생생활규정에 대하여

1) 비교기준 및 각종 지침

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학생신분에 맞는’이라는 규정은 표현이 모호하고 그 판단을 학교당국이 독점하게 되는 것임. 또한, 두발상태 불량으로 적시한 무스·젤 등을 사용하여 ‘두발형태의 변형을 가하지 않은 범위 내’라는 규정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자의적 벌점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 학교 당국이 학교 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용의사항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예시하여야 할 것임.
- 두발의 자유는 학생의 기본권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

나) 생활규정 예시안

제14조 【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복장의 부착물(명찰,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3.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4.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는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5.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 학생의 두발은 별도로 정한다.
7.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제70조 【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2) 조사분석내용

가) 초등학교의 경우

- 해당사항 없음

나) 중학교의 경우

- 두발 : 조사한 모든 학교에서 두발을 규제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일부 길이에 한해 자유화 한 곳도 있음. 긴 머리는 한 가닥 묶기를 원칙, 풀어헤치는 것은 금한다.
- 머리핀, 띠는 검정색이며, 광택이나 원색, 요란한 장식은 안 됨
- 눈썹을 인위적으로 변형할 수 없음. 눈썹밀기, 그리기 일체금지
- 색조화장 금지 및 화장품 소지 금지
- 목걸이, 귀걸이, 반지, 호출기, 휴대폰(수업 시간에 한정된 곳도 있음) 소지 시 압수
- 오버코트(패딩코트, 파카 등은 불허하며, 길이는 무릎 선까지, 색깔은 검은색, 감색, 회색만 허용)

- 학생치마는 무릎 아래 3센티 정도 되어 무릎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 신발, 양말(대부분 학교는 흰색, 회색, 검은색 계통만 허용)

다) 고등학교의 경우

- 대체로 머리길이를 남학생은 눈썹 위까지, 여학생은 귀 밑 몇 센티나 어깨에 머리가 닿지 않는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 한 학교만 학생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지 않고 파마와 염색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해 놓고 있다.
- 학교에서 정해 놓은 두발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여학생은 단발형을 남학생은 스포츠형을 하도록 하고 있다.
- 남녀 성구별이 곤란한 머리형을 금지하고 있다.
- 복장 규정에서는 양말의 색깔과 길이 신발 및 실내화 색깔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심지어 실내화의 뒷축이 있는 신발을 못 신게 하거나 가방은 어깨에 댈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기도 한다.
- 용의 규정에 3회 이상 위배되어 걸릴 경우 훈계대장기록에 기록하는 것은 물론 학생생활기록부

의 행동발달 누가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5) 기타의 내용

1) 몇몇 중학교의 경우

제43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 ☞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사정을 따지기 전에 무한대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 학생통행시간 제한(밤 10시 이내, 특별한 용무는 반드시 부모님 등 보호자와 동행)
 - ☞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
- 학급 내 봉사활동(소정의 등, 하교 시간보다 일찍, 늦게까지 있으면서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 정돈)
 - ☞ 징계의 교내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 모두 정규 일과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몇몇 고등학교의 경우

제27조【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수 없다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은 발달과정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아울러,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평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대체로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회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
- 학생이 불법집회에 참석하거나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참여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 학교장의 허가 없이 어떠한 단체에도 가입할 수 없으며 조직해서는 안 된다.
- 교내 게시를 할 경우 학생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학생들이 허가 없이 다른 학급의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다
- 주변의 임무에 다른 반 학생의 출입을 단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조사를 마치며

경남교육청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권장한 지 오래다. 2005학년도 경남 지역의 42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생활수칙, 체벌규정, 징계의 과정과 방법 등을 분석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각 학교마다 대부분 오래전 만들어진 학생생활규정들이 개정되지 않았거나, 전체의 틀 속에 몇 부분만 개정한 경우, 개정하더라도 인권의식 반영이 부족한 점 등 안타까움이 많았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학교의 여러 규정들이 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제·개정된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등 각종 규정은 온라인시대에 발맞추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